

민주자치 발전포럼

3 경상남도 창원시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2시

창원시청 2층 시민홀

주최 :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주관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 추진배경 및 목적

-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실천방안 모색
- 국정과제 연계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실천방안 모색
- 광역·기초지자체 및 의회의 정책·입법 역량 강화 지원
- 경남권 현안 발굴 및 실천방안 모색

□ 진행 개요

- 주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창원시
- 주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 일정 및 장소

진행 개요	
창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월 26일(화) 14:00~16:00 • 장 소 : 창원시청 시민홀

- 〈정책토론회〉 진행프로그램(안)

진행순서 및 패널(안)		
발전포럼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 허성무 창원시장
	14:00~14:30	
	정책토론회 (창원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창원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 발제1 : 창원의 기본 좋은 변화(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발제2 : 창원시 주요현안 (김종대 창원시의원) • 토론1 : 창원특례시 현황 및 과제(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 토론2 : 마산항개발에 해양신도시는(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 토론3 : 창원스마트선도 산단 구축방안(김종호 창원시산업진흥원 정책팀장) • 참석자 자유토론 : 지방의원 및 당원(대의원) 및 지역민 등
	14:30~16:00	

- 자치발전연구센터 구성원 안내

성명	직책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문병주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고영국	정책네트워크실 연구위원
박동욱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허필윤	자치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민주연구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지역위원장 여러분과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이번 「경남 창원 민주자치발전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 소속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위원장님, 발제를 맡으신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님과 김종대 창원시의원님, 토론에 참여하신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 원장님, 박재현 인재대 교수님, 김종호 창원시 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님과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연구원 내에 설립된 자치발전연구센터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경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오늘은 창원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 당은 강령과 당헌·당규에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8일,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창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도시를 넘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나아가 포용국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6.

▶ 당대표 축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해 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창원에서 열리게 된 경남 창원 민주자치발전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그 실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추어 민주연구원 내 자치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방혁신 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원시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12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들도 선택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술회하셨습니다. 창원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원의 성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특화사업은 집권당의 보증 아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창원을 시작으로 지방 혁신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민주자치발전포럼의 더욱 다양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6.

이 해 찬.

▶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축사



국회의원
김 두 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남 창원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2019년 핵심사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허성무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님, 김종대 창원시의원님,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님,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님, 김종호 창원시 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올 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올 해는 그 새로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셨고,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4조 7천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50년 숙원을 해결하고 경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R&D투자 사업은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와 예산 확정 단계에서 최대한 지역의 요청들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도지사 구속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기에 지난 2월 18일 올해 가정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했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과 창원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산단 조성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는 것은 지역의 현장이고, 그 변화의 힘도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와 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이 지역의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자치발전포럼이 개최되는 창원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 최근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하나로 뭉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고, 지난 20일, 창원국가산단이 2022년까지 2,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민주자치발전포럼은 광역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정부 단위에서부터 지역의 현안사업들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반영해 나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자치발전포럼을 통해 창원시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말씀해 주신 창원시의 현안들을 챙기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6.

경상남도당 위원장 축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민 홍 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원 민주자치발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되는 창원과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인해 재도약을 시도하는 통영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번 문재인 정부처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나 지방자치의 날 축사에서든 문재인 대통령은 한결같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만큼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경남에는 1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번 민주자치발전포럼이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것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논함으로써 그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모쪼록 창원과 통영은 물론이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정부의 국정이 잘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층 발전된 경남, 창원, 통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와 경남도당 역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원과 통영을 시작으로 민주자치발전포럼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논의된 내용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 경남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챙기고,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당은 항상 경남의 발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6.

창원시장 축사



창원시장
허 성 무

경남 창원 민주자치발전포럼 개최를 환영합니다!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민주자치발전포럼’이 창원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차·조선·철강산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줄고,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분권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기구를 출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자긍심 고취와 도시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새바람을 통해 창원시가南海안 거점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주자치발전포럼을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창원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포럼이 역사와 전통의 도시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장인 창원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6.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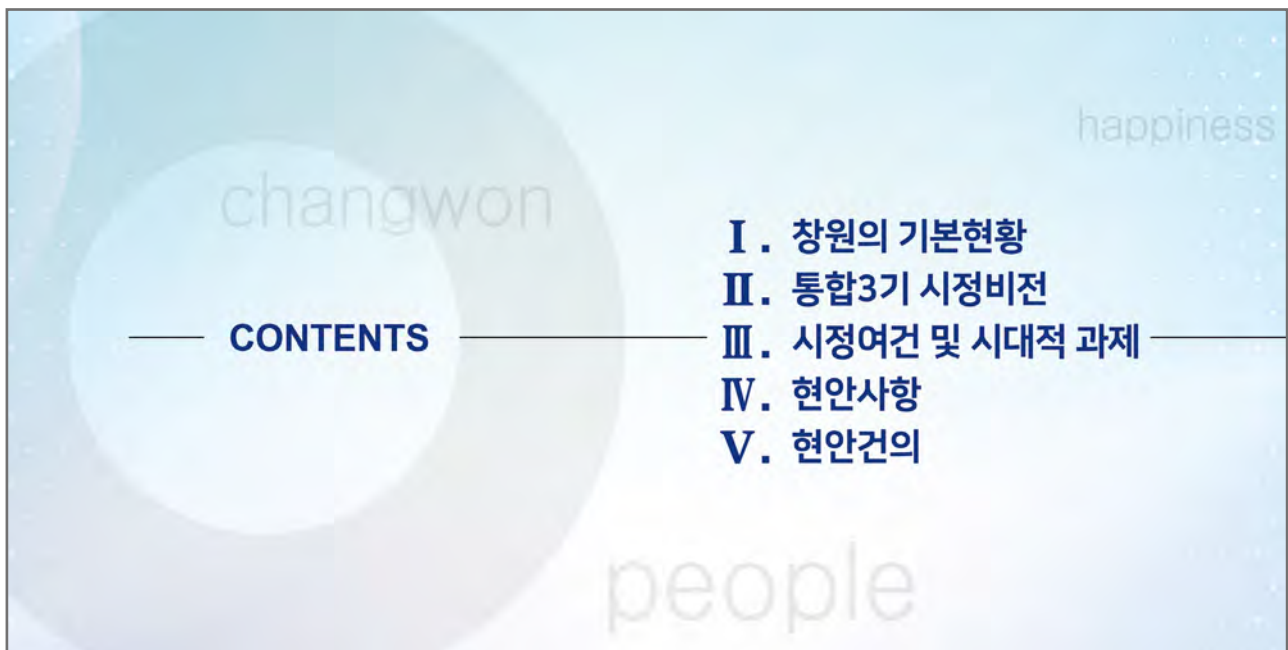
민주자치발전포럼 **3** 창원시

정책(聽策)간담회

[발제 1] 창원의 기분좋은 변화	11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발제 2] 창원시 주요현안 사업현황	29
김종대 (창원시의원)	
[토론 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현황 및 과제	75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토론 2] 마산항개발에 따른 해양신도시는.....	85
박재현(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토론 3] 창원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 방안	95
김종호 (창원시산업진흥원 정책팀장)	

창원의 기분좋은 변화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사람이 주안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창원의 기본틀은 변화

창원의 기본현황

- 01 일반현황
- 02 도시특성
- 03 창원의 위상

01 일반현황

기본현황

인 구 : 106만명
[경상남도의 32%]

면 적 : 747km²
[해안선 324km]

재 정 : 2조 9,872억

경제지표

수 출 : 176억불

GRDP : 36조 6,936억원

기업체 : 4,740개사
[종사자 121,414명]

기반시설

주택보급률 : 109.6%

상수도보급률 : 98.2%

하수도보급률 : 96.5%

02 도시특성

대한민국 4대 민주화 의거 발원지



3·15 마산의거
(이승만정권 하야)



4·11 마산의거
(4·19 혁명의 도화선)



10·18 마산민주항쟁
(유신정권 종언)



6·10 마산항쟁
(87년 6·29선언)

민주화의 뜨거운 횃불을 점화시킨 **"민주정신의 수호고장"**

02 도시특성

동북아
생산거점 도시
창원

INDUSTRY HUB

- + 한국 최초 계획도시
- + 국책·대학·기업 연구소 705개소
- + LG, 현대, 두산, GM 등 62개 대기업 소재
- + 국제 해양물류산업 중심도시

세계적인 기계산업도시 & 대한민국 방위산업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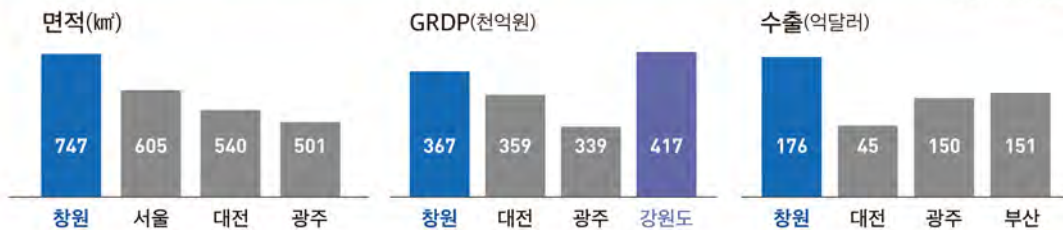
- + 공작기계 : 한국의 80%
- + 기계산업 : 한국의 20%
- + 방산매출 : 한국의 27.2%
- + 국가지정 방산업체 : 21% 입지

해방 후 경제 불모지를 반세기만에 기계산업 메카로 일구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산업화의 프라이드"**

03 창원의 위상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 75개 기초市 중 종합경쟁력 3위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발표



대도시에 버금가는 경쟁력(인구, 면적, 경제)을 지닌
“동남 광역경제권 제1의 성장거점 도시”

03 창원의 위상

외부에서 바라본 시정 평가(2018년)

세계가 창원을 주목합니다

-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
91개국, 4,300여명 참가
- 창원세계민주평화포럼창원선언문채택
- 옥타세계한인 경제인대회 개최
수출상당2,200억원(계약추진470억원)
- 2018 창원국제수소에너지 포럼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 전국 지방자치단체일자리 대상

사람이 주안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창원의 기본틀은 변화

통합3기 시정비전

시정목표

사람중심 새로운창원

New Changwon, People-Oriented City

시정방침

-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시정
-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 삶이 여유로운 행복창원
- 공정하게 누리는 시민권리
-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발전전략

[3대 균형 발전전략]



[4대 도시 발전전략]



시정기조

소통하는 시정

따뜻한 시정

발로 뛰는 시정

시정여건 및 시대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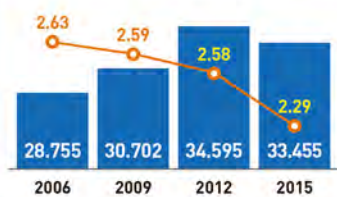
01 창원의 현주소

02 경제부흥 4대 전략

- 전략 1. 창원경제 뉴딜 프로젝트
- 전략 2. 힘되는 일자리 창출
- 전략 3. 내수&수출 활성화
- 전략 4. 투자유치 매커니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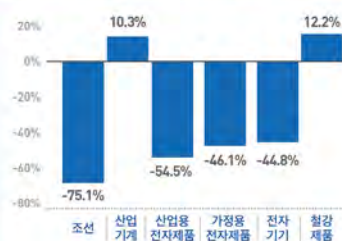
01 창원의 현주소

지역경제 실질규모 축소



창원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대비 비중

주력산업의 전반적 수출부진 지속



창원시 산업별 수출 증감

지역내수 경직심화



전국 및 창원의 소매업판매지수

02 경제부흥 4대 전략



창원경제부흥 전략은 정부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어 동남부권 경제회복 터닝에도 직접적 영향
"정부여당과 중앙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

전략 1. 창원경제 뉴딜 프로젝트



*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선도산단 선정

2026년 창원산업단지 고용 17만명, 생산액 100조 달성

전략 2. 힘되는 일자리 창출



민선7기 일자리 14.4만개 창출, 고용률 66.0% 달성

전략 3. 내수&수출 활성화



전략 4. 투자메커니즘 강화

투자인센티브 강화



- 수소·방위·항공산업지원 (최대 20억)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최대 100억)
- 투자유치진흥기금(최대 50억)
- 대규모 투자기업특별지원 (최대 100억)

INCENTIVE 투자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 시스템 강화



- 중소기업-해외기업기술합작투자(JV)지원
- 매출·유휴부지전략적 투자 유치
- 3대 핵심산업감소형 기업 유치
- 투자 가능부지조사 및 사업관리자(PM)운영

사람이 주인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창원의 기본종은 변화

현안사항

- 01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 02 4차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 03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전환
- 04 야구메카 조성으로 국제스포츠 도시로 도약
- 05 세대공감 역사문화도시로 정체성 강화

01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특례도시 지정 필요성

100만 도시 역차별, 불이익

> 행·재정적 비효율 발생 및 행정서비스 한계 직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18.9.)

>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자율권·자치권 확대 약속

추진계획

2018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발표

2019
특례시 법제화

2020
행·재정적 자치권한 획득

성년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100만 대도시 자치권한 확보" 및 "특례시 조기 법제화" 필요

02 4차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창원형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조성

- 규모 : 64만 2천㎡ (축구장 100개 넓이)
- 내용 : 도시통합운영센터, ICT망, 지능화된 공공시설

추진계획

1단계
(2018. ~ 2019.)

스마트 도시
기반조성

2단계
(2020. ~ 2023.)

스마트도시시범사업
본격 시행

3단계
(2024. ~ 2027.)

창원형 스마트도시
파급 확산

해수부의 국가무역항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된 준설토투기장(마산해양신도시조성이 마무리 단계
난개발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위해 전향적인 정부 지원 필요

01. 해양신도시 사업비(3,403억)에 상응하는 "국가 간접지원"
02.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의 "2차 국가 시범도시 공모추진" 전개가 관건

※ 1차 국가 시범도시 : 세종 5-1생활권, 부산 예코델타시티

03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전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2022년)



2019년 환경부의 전기버스 지원물량 30대로 한정
대중교통 시스템의 친환경화를 위해 지원물량(30대 > 100대) 확대 필요

04 야구메카 조성으로 국제스포츠 도시로 도약

마산야구메카 조성

- 기간 : 2019. ~ 2025.
- 사업비 : 750억
- 위치 : 舊마산권 일원

야구테마파크 조성

창원 NC파크, 마산야구장
유소년 구장, 야구문화센터

야구장 상권 신바람

야구장 특화거리
(400m)

야구장 가는 길 브랜드화

야구간판거리,
야구로 조성

야구 + 축구 + 농구 3대 프로스포츠 연고지(기초시 유일)
메이저 리그 수준의 신설야구장과 세계유일 도심형 국제사격장 보유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야구메카 조성에 재정지원 필요

05 세대공감 역사 문화도시

근현대사·산업사 재조명 - '창원 600년 역사 정체성 확립'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의 보급 · 확산을 위해 **범정부, 여당 차원 관심 필요**

현안건의

- 01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02 기초지자체 항만의 개발관리참여 확대
- 03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 04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 05 동남부권 철도물류망 확장
- 06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

01 강소연구특구 지정

특구개요

기술핵심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배후공간 : 창원국가산단(1.7km²) + 불모산 지구(0.14km²)

특화기술 : 지능형 전기기반 기계융합산업

파급효과

생산유발
3,462억원

부가가치
1,692억원

취업
2,447명

지정절차

강소특구 지정요청
시·도지사

2018. 12.

부처협의
관련부처 등

2019. 03.

특구위원회 심의
특구위원회

2019. 05.

강소특구 지정
과기부 장관

2019. 06.

과기부 지정요건 및 강소특구 '우선' 개발 원칙을 모두 충족한 창원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건의

02 기초지자체 항만의 개발관리참여 확대

세계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 항만정책 결정

세계 주요국가 항만정책결정권
> 지방정부 이양

우리나라 항만정책결정권
> 중앙·광역 중심 (기초시 참여배제)

항만의 개발관리참여 확대 필요성

기초시 위원 부재로 잠재적 갈등상존
(제1신항조성 어업인 생계문제현재까지미결)

제2신항 유력 후보지 100% 창원 행정권역
> 주민의견, 지역현안 적극 반영필요

100만 도시의 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를 위한 항만법 개정
어업권 소멸 어업인을 위해 "어민생계대책특별법" 제정을 건의

03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재료연구소 현황

면 적 부지 70,209m², 건축 14,042m²
 근무인력 총 397명
 예산규모 854억, 시설장비 2,927종

연구소 > 연구원 승격 당위성

- 국가차원 소재분야의 총괄 전문 연구기관 설립 필요
- 국내 소재산업,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 20.5%, 생산액 기준 16.3% 차지

추진일정

1

박완수 의원
 故노회찬 의원
 법률안 발의(2017)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현재: 계속심사결정

3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전국의 부설연구기관의 독립요청 요구 우려로 과기부의 출연기관 확장 주저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정책적 지원 건의

04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사업개요

조성규모 350억 [부지 6,600m², 연면적 15,000m² / 본관동 및 센터동 건축(8층)]
 근무인력 총 200명 규모
 기 능 국방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R&D

추진일정

1

백승주 의원(2017)
 이철희 의원(2018)
 발의

2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상반기 중 상정
 예상

3

방위산업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방위산업진흥원 법안심사소위 통과 및 창원유치에 정책적 지원건의

05 동남부권 철도 물류망 확장 (1)

창원산업선 조성 > 영남권 순환철도망 구축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비고
마산신항선	마산역~마산신항(12.5km)	2,500	국가철도망 계획확정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40.1km)	8,164	국가철도망 계획확정
창원산업선	대합산단~마산역(42.0km)	8,400	건의노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창원산업선 반영 건의

05 동남부권 철도 물류망 확장 (2)

수도권 ~ 창원간 KTX 증편

창원시 이용객최근 5년간 126% 증가

열차운행 횟수는 비슷한 인구·경제권을 가진 울산광역시와의 27% 수준

영남권 주요 도시 고속철도 왕복 운행 횟수

동대구	253회
부산	197회
울산	103회
창원	28회

유사한 도시규모 대비 속도경쟁력이 취약한 창원에 철도물류망 확장 필요
KTX 증편 (日왕복 28회 > 40회) 정책적 지원

06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시 진해구

1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2018.5. 29. ~ 2019.5. 2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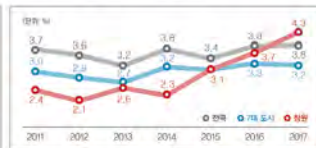
2 고용위기지역 지정
2018.4. 5. ~ 2019.4. 4.(1년)

연장 필요성

- 산업체질개선사업정부예산액반영 규모 : 4.6% 수준 (신청) 4,464억 > (반영) 205억
- 한국GM 창원공장, 두산중공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신위기상향대응



〈 창원 기업경가심사지수(BSI) 〉



〈 전국, 7대 도시 및 창원의 실업률 비교(2011~2017)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창원시 전역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changwon

happiness

국민의 희망은 키우고 근심은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ople

창원시

창원시 주요현안 사업현황

김종대 (창원시의원)

민주자치 발전포럼관련 창원시 주요현안 사업현황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2.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동향
3.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 방안
4. 제2신항 구축
5.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6.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 ❖ 서항친수공원, 돌섬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 문화·관광·해양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마산합포구 월영·가포동 일원
- 규 모 : A=1,070m²(서항지구 642m², 가포지구 428m²)
- 사 업 비 : 4,493억 원(민자PF, 분양 3,857, 시비 636)
- 사업기간 : 2014. ~ 2019.
- 시 행 자 : 창원시[대행자 : 마산해양신도시(주)]

□ 추진상황 공정을 전체82%, 서항지구 75.6%

-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체결(시 ↔ 해양수산부) : '03. 12.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가포지구 공사착수 : '10. 06.
- 정부T/F 서항지구 매립면적 축소결정(34만평→19만평) : '11. 03.
- 서항지구 공사착수(642천m²) : '12. 07.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인가 : '13. 11.
- 가포지구 분양 착수(서항 호안축조 완료 '14. 08.) : '14. 02.
- 가포지구 사업준공(428천m²) : '15. 05.
- 복합개발시행자 공모(1차) : '15. 0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영] : '16. 04.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선정취소 통보) : '16. 12.
-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제안 공모(2차, 한중) : '17. 02.
- 복합개발 공모사업 사업신청서 접수 무효 통보 : '17. 06.
- 복합개발시행자 공모(3차, GS컨소시엄) : '18. 02.
-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취소 : '18. 08.
- 공사비 검증단 발족 및 시행 : '18. 08.
- 공사비 검증단 활동종료 및 브리핑 : '18. 12.
- 서항지구 연약지반개량(재하성토) 및 서항1·2교 공사중 : '19. 2. 현재
 - 서항1·2교 : L=85m, B=35m_왕복6차선

□ 추진계획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결정 (공론화 위원회) : '19. 10.
- ※ 개발방향 결정에 따라 향후 계획 변경

□ 위치도



□ 전경사진



마산해양신도시(준설토 투기장) 국가지원 건의

※마산해양신도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I. 사업의 목적

- 친수공간, 돌섬, 해양신도시 등 마산만 일대의 유기·통합적 개발로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용지개발로 경제 활성화 및 활력있는 도시발전 기여
- 친환경 항만도시건설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공간기능 재정립 필요

II. 사업의 배경

- 마산항 1899년 개항, 진입항로 수심(8.9m~12m) 부족으로 대형 선사 이용 기피
- 항만시설(서항부두, 1부두, 중앙부두) 도심지 내 위치, 90년대부터 외곽 이전 검토
-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서항 및 가포지구 준설토 투기장 지정, 각각 도시용지와 항만배후단지 조성
- 2003.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30여명의 인명피해, 6천억원의 재산피해 발생으로 도심지에 있는 노후된 부두의 이전 및 마산항의 개발 필요성 부각
 - 태풍 매미 이후 서항, 1부두, 중앙부두 기능 전환 및 이전 배치
- 2003. 12월에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항·가포지구 개발 계획에 관한 협약서 체결(해양수산부 ↔ 구.마산시)
 -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자 공모(구.마산시)
- 2004. 6월 가포 신항 개발 민간투자자 유치(해양수산부)
 -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제1부두 철재 및 석탄 적재 (1980년대)	1부두 부근 유원연탄 공장 (1990년대)	서항부두 목재 야적 (2003년)

Ⅲ. 사업 개요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가포동 일원

○사업규모 (당초) 1,774천㎡(537천평) [서항 1,342(406천평) / 가포 433(130천평)]

(변경) 1,070천㎡(324천평) [서항 642(194천평) / 가포 428(130천평)]

○총사업비 : (당초) 6,910억원 → (변경) 4,493억원

〈총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서항지구		가포지구		비 고 (미집행액)
	계획	지출	계획	지출	계획	지출	
총 계	4,493	3,469	3,403	2,379	1,090	1,090	1,024
조 사 비	26	26	22	22	4	4	-
설 계 비	98	98	80	80	18	18	-
공 사 비	3,189	2,382	2,614	1,807	575	575	807
보 상 비	305	276	54	25	251	251	29
부 대 비	478	321	375	218	103	103	157
건설이자	397	366	258	227	139	139	31

※ 재원조달은 PF자금으로 선투입하고 토지분양 대금으로 상환

〈재원현황〉

(단위 : 억원)

계	민 자			시 비	비 고
	소계	PF	분양		
4,493	3,857	1,244	2,613	636	

IV.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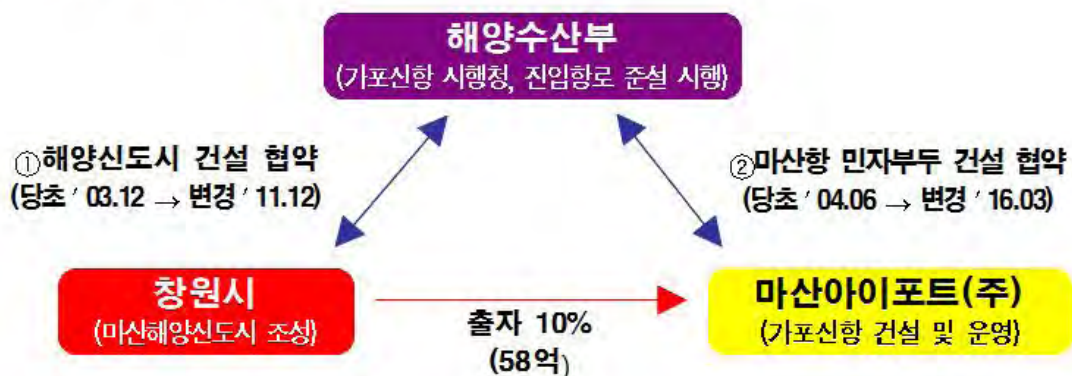
-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97. 12.
- 마산항 기본계획(변경) 고시(해양수산부) : '98. 2.
-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시설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해수부) : '00. 11.
- 해양수산부 정책심의회 : '03. 5.
 - 해수부 차관 주재 : 개발주체(구.마산시), 개발방법(도시개발사업) 결정
- 마산항개발(1-1단계) 관련 서항·가포지구 개발방안 및 타당성 조사용역(구.마산시) : '03. 9. ~ '04. 3.
-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 체결(해양수산부 ↔ 구.마산시) : '03. 12.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구.마산시' 책임 하에 확보·조달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 '05. 3.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구.마산시↔민간사업자) : '07. 2.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금융약정(PF) 체결 : '07. 3.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가포지구 공사 착수 : '10. 6.
- 통합 창원시 출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 결정 : '10. 7.
-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방향 및 개발계획(변경) 추진 : '10. 8. ~ '13. 3.
 - 민관 조정위원회,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시의회 의결, 자문위원회 검토
- 서항지구 매립 면적 축소 결정(정부 TF / 34만평 ⇒ 19만평) : '11. 3.
-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항·가포 개발(변경) 협약 체결 (국토부 ↔ 창원시) : '11. 12.
 - 가포신항 준공기간 1년 연장(2011. 12. → 2012. 12.)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착수(호안축조) : '12. 7.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3. 11.
- 마산해양신도시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 완료 (외곽 : 3.2km 내부 : 1.1km) : '14. 10.
- 항로준설 및 준설토 투기 완료(마산해수청) : '14. 11. ~ '15. 1.
- 연약지반개량 및 서항1·2교 설치 공사 중(전체공정률 74%) : '18. 10.

V. 마산해양신도시 국가지원 당위성

①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

해양신도시 사업도 협약에 앞서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사업에 창원시가 적극 부응한 결과물로, “정부·창원시 공동책임 사업”입니다.

■ 사업관계 및 협약 체결현황



- 마산항 개발 민자투자시설사업 고시('00년) → 민간투자자 사업계획서 제출
 - ✓ 정부지원사업 : 진입도로, 항로준설 / ✓ 민자사업 : 부두, 준설토 투기장 개발
- (민간사업자 준설토 투기사업 포기) 당초 민간의 제안사업에 포함된 준설토 투기장 (해양신도시)은 '사업성 부족과 반대 민원'을 이유로 민간사업에서 제외요구 → 정부수용
- 대신 정부 (기재부, 해수부)는 서항·가포 개발방안 타당성 조사('02년)를 토대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권고
 - 정부 ⇨ 신항이 건설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 제시
 - ✓ 해수부 마산항 광역개발 계획 : 제조업체비율 3.6배, 취업인구 5.3배 등
 - 마산시 ⇨ 적정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항 요구 → 정부 미수용
 - ✓ 마산시 요구 : 항만부지 전여토지를 가포지구와 조성원가 교환 / 기반시설비 지원(100억원)

- 특히, 舊마산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무역항 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기초시 입장에선 상당수 부담으로 작용
- 마산시로서는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의 요구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채 협약체결

정부는 마산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마산시 책임과 부담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도록 주도적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 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용은 “항만법 제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 “국가정책의 전향적 참여요구”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견과 신뢰에 근거”해 마산시가 모든 조성비용을 부담

제66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 ⇒ 그 결과, 정부는 국책사업인 항만시설 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 이상 예산을 절감 * 투기장 조성 1,500억, 외해투기 2,400억원
- ⇒ 반대로 市는, 정부가 예측한 경제효과는 요원한 채 체결된 협약에 구속되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감수 中

2 정부의 가포신항 물동량 예측오류로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마산항 개발사업에 주근거가 되는 정부예측 물동량은 빗나갔고, 정부가 자신했던 경제파급효과는 全無했습니다.

구분	예측 물동량	2017년 물동량	
일반화물	3,480만 톤	1,320만 톤	예측 대비 38% 수준
컨테이너 화물	51만 6천 TEU	1만7천 TEU	예측 대비 3% 수준



- 당시, 마산항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불과 40~50km 거리에 국가 Mega-Port 인 부산항 신항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컨테이너 부두로 운영이 불가하였으나 재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
-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부두역할 不能) 물동량 예측이 빗나가 기존 마산항 4부두를 통해 수출하던 자동차 수출물량까지 끌어와 운영해야 할 정도로 컨테이너 항만 기능 상실
- (잡화부두 전략)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는 깨끗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원목, 철제를 취급하는 '잡화 부두'로 전략

마산항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는 없는 채, **해양신도시로 인해** 마산만 수질악화와 구도심 쇠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합니다.

3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평등 원칙 견지 필요

정부는 마산항 개발사업에 초근거가 되는 정부예측 물동량이 빗나가자, 협약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의 항만개장 연기) 가포신항은 2005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준공됐지만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장연기
-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고자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사업재구조화 논의를 거쳐 항만개장 (‘15.)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 (‘16.)
- (항만용도 변경) 컨테이너 전용부두 → 일반 다목적 부두 용도변경
- (MRG 지급 재구조화) 민간투자사업자의 MRG 협약 변경요청에 정부는 제한적으로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건설비용 1,480억 보전)

증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와는 협약을 변경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에게는 기존의 협약만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反한다 할 것입니다.

4 지역사회의 공영개발 여론 등 공익우선의 원칙 고려

- 당시 마산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마산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도시개발용지로 확보 → 아파트 및 상가지역 조성 추진
- 하지만 협약 체결 시 지역여론을 수렴하지 못하였고, 현재 주민들은 주거·상업 위주 도시개발에 반대, 공영개발 요구
- 특히, 현재 창원은 미분양 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성을 우선하는 아파트, 상업시설 중심의 민간개발은 주택시장 악영향 뿐만 아니라 구도심 쇠퇴문제까지 발생

5 **대통령님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과정에 문제인식 공유**

대통령님 후보시절 정부차원 대책 마련 말씀('17. 5.)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17. 8.)

“가포신항은 애초 사업계획이 잘못돼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정부의 既 체결된 협약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을 도외시하고 본 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
- 동북아 랜드마크로서 가능성을 키우고 남부권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정부지원이 절실

협약체결 당시의 기초가 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들이 변경되어 버린 現상황에서 창원시만이 본 협약에 따라 전적으로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 1,500억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기초시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민자국책사업 이라는 점과 협약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직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평등원칙 견지필요”, “공영개발 여론에 따른 공익우선 원칙” 을 고려해 협약내용은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VI. 건의

- + 해양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되는 협약을 맺은 지 15년 지난 지금, 창원시는 마산항 개발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협약 체결당시 정부 물동량 예측과 마찬가지로 마산시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 하지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존 협약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정부정책에 협조한 106만 창원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 + 앞서 정부는,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인정하고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코자 민간사업자와 협약변경을 한바 있는데, 이는 신도시 역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시대인 만큼,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키우고 마산만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100만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정에 있어 정부 - 창원시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요청**드리며, 국비직접지원이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간접지원사업 (친환경 해양문화 타운 조성)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① 마산항 수질 Upgrade 사업 추진 [2,800억]

⇒ 마산만 내호 구역 인공조간대 조성 및 오염퇴적물 정화

② 국립 水생태계 보전 박물관 및
국립해양 종합안전테마파크 건립 [2,000억]

③ 해양환경공단 이전

2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동향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동향

□ 스타필드 건립개요

- 위 치 : 의창구 중동(구 39사단 부지)
- 면 적 : 34,311㎡(약 1만평)
- 개발내용 : 대형 복합쇼핑몰
 - 지하5층 / 지상 5층, 연면적 30만㎡내외
 - 주요시설 :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시설 등

□ 그간 추진사항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없음(창원시)

- '16. 03. 31. : 대물변제 협약 체결【창원시↔(주)유니시티】
- '16. 04. 26. : 상업용지(1BL) 매매계약 체결【(주)유니시티↔(주)신세계 프라퍼티】
- ※ 매매금액 750억원【납부 450억원, 잔금 300억원】

□ 입점시 진행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한	비 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의의뢰 (사업자 → 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3개월 이내) ※ 심의 결과 보완의결(재심의)시 처리기간 연장 가능 ※ 관계기관협의기간은 불산입 	3개월	市 교통물류과
건축허가 신청 (사업자 → 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 건축법 • 51층 이상, 연면적 20만㎡이상 → 사·도시자 사전 승인 (행정체제개편특별법) 		사업자
사전승인 신청 (市 → 경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승인 신청(50일) ※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건축심의(道 건축 공동위원회)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道 → 市) 	50일 (30일 연장가능)	道 건축과
건축허가 (市 →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건축허가(15일) ※ 서류보완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가능 	15일 (보완시 연장가능)	市 건축경관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사업자 → 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개설등록 신청 : 건축허가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 계획서 		市 경제살리기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검토 (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 내용 미진 → 보완요청(30일 이내) • 전문기관 조사(필요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유통법 시행령 제6조의6) 	30일 (보완시 연장가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통보 (市 →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 등록 취소 (건축에 정상적 소요되는 기간은 미산입) 		
착공 및 준공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사업자

※ 대규모점포 개설 예고 : 영업 개시 60일 전

□ 지역 및 신세계 측 동향

○ 지역여론 : 지역경제발전, 중소기업업자 몰락 등 찬반여론 공존

찬성여론	의혹제기 및 반대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여건 및 시민 여가활동 대폭 개선 - 소비 역외유출 방지 및 도심공동화 방지,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거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창원 전체상권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창고형 마트 제외하면 소상공인과 크게 겹치는 브랜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체 및 인근 주민불편 심각 - 스타필드 입점으로 수익금이 본사로 가면 창원경제 더욱 침체 -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재래시장 판매품목과 중복) - 경제파급효과 객관적 수치 공개 선행요구
창원스타필드 지지자 시민모임	스타필드창원 반대 중소기업대책위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협회, 경남나들가게협의회, 시티세븐상인회, 진영패션아울렛거리상가번영회, 중앙동 상가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등

○ 신세계 프라퍼티 : 인허가 서류 작성 등 계획 준비

□ 향후일정

○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진행 시

- 공론화 의제 선정(기획관)
- 스타필드 사업계획서 기초로 상권영향조사(경제살리기과)
- ⇒ 상권영향조사 결과서를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관련 논의에 따른 기초자료로 제공 예정

※ 위 치 도



3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 방안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 방안

◇ 공원일몰제('20.7.1.) 시행 전 도시공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00. 7. 1.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 6.30.까지 미집행 공원 '20. 7. 1. 효력상실」
※도시계획결정 후 사유지 보상없이 장기간(20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 판결)

I 일몰제 공원 현황

○ 공원 및 실효대상 공원 현황

공원현황 (438개소)	실효 공원		
	합 계(62개소)	'20.7.1.(26개소)	'20.7.1.이후(36개소)*
29.65km ² (100%)	15.86km ² (53.5%)	14.52km ² (49.0%)	1.34km ² (4.5%)

※'20. 7. 1.이후 실효공원은 도시개발사업시 의무확보공원, 시재정불요

II 추진 사항

○ 우리 시 우선관리(공원존치)지역 선정('19.2.현재, 민간특례사업 포함)

'20.7.1. 실효대상공원 (26개소)	우선관리지역(18개소)			도시계획적 관리(해제) (8개소)
	합 계	사유지	국.공유지	
14.52km ² (100%)	10.00km ² (68.9%)	4.75km ² (32.7%)	5.25km ² (36.2%)	4.52km ² (31.1%)

우선관리지역: 법적·물리적 제한이 없는 개발가능지역과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창원시가 매입하여 공원으로 유지하는 지역

○ '도시공원을 미래의 유산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1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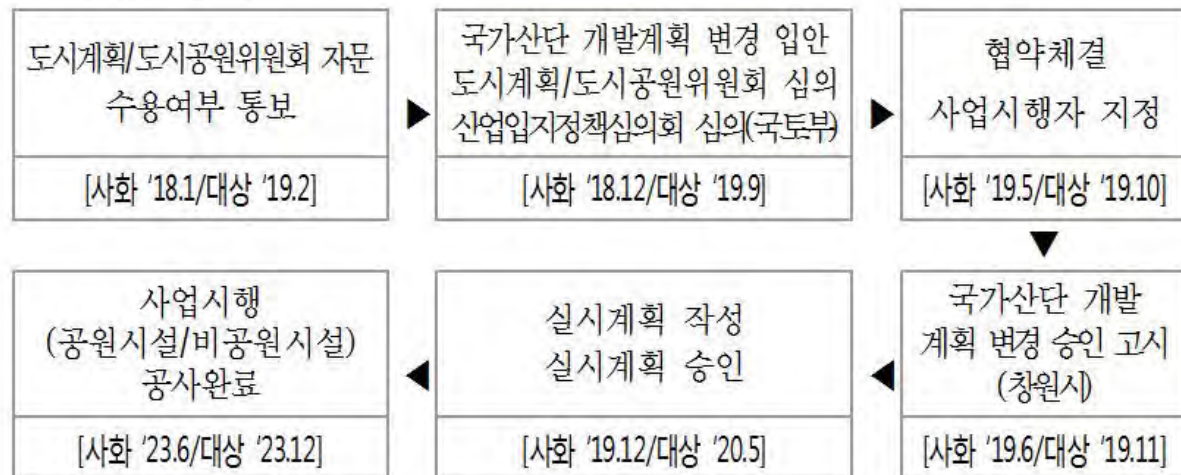
○ **공원부지 보상** '19. ~

III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 사업개요

구 분	사화공원	대상공원	비 고
공원면적	1,433,114㎡	1,095,357㎡	
사업면적	1,223,771㎡ ※ 사유지 919,673(75%)	970,121㎡ ※ 사유지 606,278(63%)	기조성 제외
사업비	8,366억	8,577억	
비공원시설	182,428㎡(14.9%) [1,980세대]	115,635㎡(11.9%) [1,985세대]	
공원시설	1,041,343㎡(85.1%) ※ 아트포레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854,486㎡(88.1%) ※ 빅트리, 빅브리지, 시민센터 등	
현 추진현황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중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추진계획



IV 국토교통부 대책

- 지방채 발행: 추가발행허용 및 이자 5년간 국비에서 50%지원
- 토지은행: LH공사가 공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비축하고 사업자에게 공급

V 문 제 점

<우선관리지역>

- 사유지 보상비 과다-**4,650억원**(민간사업 2개소 제외시 **2,910억원**)
 - 재원: 시예산 1,010억원, 지방채 900억원, LH토지은행 1,000억원
-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 공원일몰제 지원대책 부족

<민간공원 조성사업>

- 우리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수급 불균형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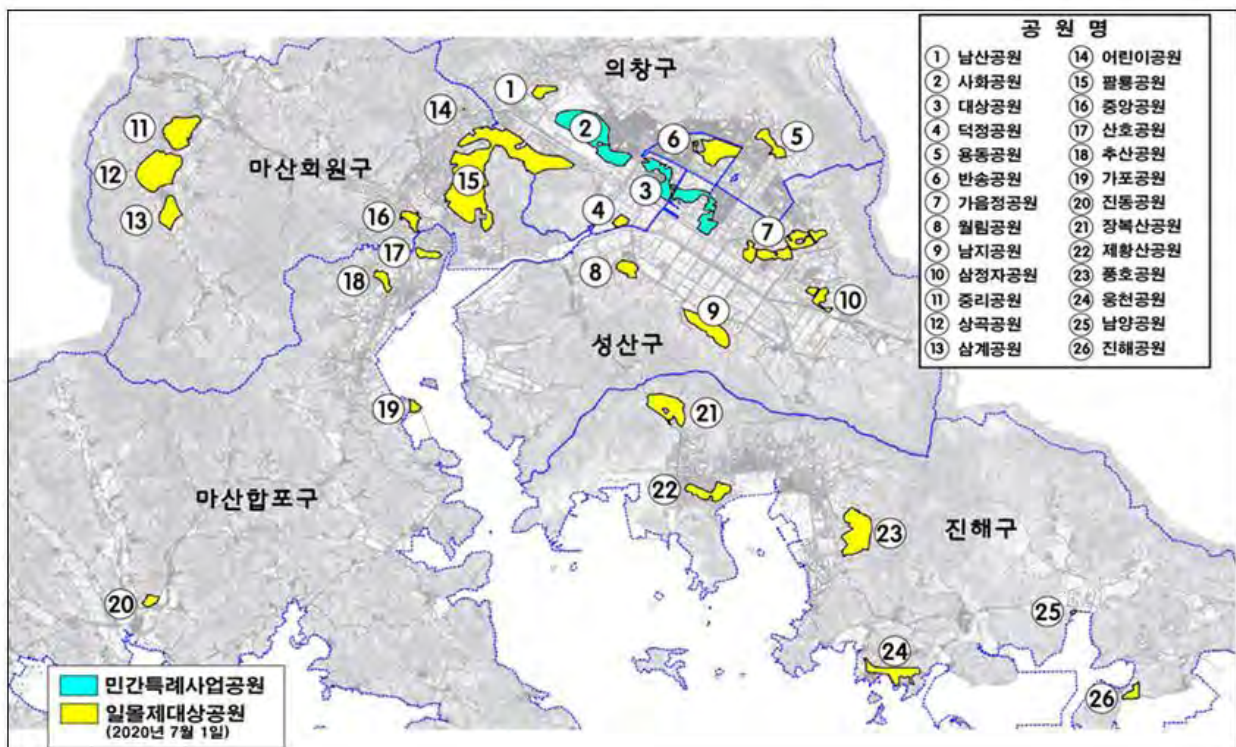
<창원시의 건의사항>

- 국토교통부
 - 보상비 재원 중 지방채 발행금액의 이자를 5년이상 국비에서 지원
- 경상남도
 - 도립근린공원 지정과 재정적 지원(보상비 일부)

<민간공원 대응방안>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축소로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검토

VI 공 원 위 치 도



4 제2신항 관련자료

신항[창원] 대형항만[제2신항] 구축

□ 추진배경

- 18,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증가 추세로 세계 주요 항만 대형 항만 건설 및 단일 운영체계 구축
 - 항만기능 신항 이전, '50년 4천만 TEU 처리 가능항만 개발 추진
- 동북아 최대 항만으로 항만중심지 역할 수행 및 재편 가능

□ 해양수산부 개발 계획(안)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제덕일원(①안), 부산시 가덕도(②안)
- 규 모 : 21선석 ~ 24선석 추가 개발
- 사업비 : (진해)12조 7천억원 ~ (가덕)17조 8천억원
 - * 최종 : 57선석(경남 37선석, 부산20선석), 하역능력 3,407만 TEU

제2신항 개발 계획안(해양수산부)



위치	①안 창원시 진해구 제덕 일원	②안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규모	접안시설 8.33km(컨 17선석, 피더 4선석)	접안시설 10km(컨 24선석)
장점	적정수심, 기존 신항과 연계성 및 경제성 양호	장래 부지 확장(대규모), 외곽시설 비용 저렴
단점	어업인 민원 예상, 항만배후단지 입지 한계	어업권, 저수심, 항만접근성·경제성 불리, 환경 규제
사업비	약 12조 7천억원	약 17조 8천억원

< 쟁점사항 및 기대효과 >

· (해양수산부) 입지여건, 유치의지, 지역여론 등 고려, 최종 입지 결정
· (지역여론) 항만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 어업 손실로 지역 반대 우려
· (지방세수) 항만 및 배후단지 110개사 입주, 최소 70억원/연 예상
· (고용창출) 21선석 추가 개발(4,200명) 및 제조·물류기업(2,500명) 고용 효과
· (건설효과) 건설사업비 12조 7천억원 투입, 5조원 가량 건설업 직접 효과 기대

□ 그간 추진사항

- 해양수산부 항만국장과의 면담 : '18. 11. 13.
- 경상남도 주관 진해구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 '19. 01. 09.
- 제2신항 관련 창원시 입장표명 기자회견 : '19. 01. 31.

□ 문제점

- 기초지자체는 배제한 국가항만정책 결정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기초지자체 참여 배제
 -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위원추천권 광역에만 부여
 - 항만개발로 인한 경제혜택 범위는 전국화, 광역화인 반면
 - 환경피해,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 부담범위는 오로지 기초市
 - 기존 신항부지의 70%이상, 제2신항 예정부지의 100% 창원시 구역
- 제2신항 건설과 관련 지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함

□ 대책

- 100만 이상 광역시 규모의 기초지자체 항만자치권 부여
 - ⇒ ‘중앙항만정책협의회’와 부산항만위원회’에 창원시 참여
- 창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제2신항 입지 선정을 위해 지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련 병행 추진
 - ⇒ 어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입법 필요

□ 향후일정

- 해양수산부 대형항만 입지 결정 : '19.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항만기본계획 고시 '20.12) : '19. 상반기

참고

부산항 제2신항 사업계획안[해양수산부, 비교표]

구 분	제2신항(경남지역) (3단계 확장)	제2신항(부산지역) (가덕도 동측 신설)
평면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3단계를 서측으로 확장가능 해역까지 넓혀 최대한의 선석 확보 ■ 기존 부산항 신항의 연계 운영으로 최대의 환적거점항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부지 계획 및 장래 확장에 유리한 가덕도 동측 신규입지에 항만개발 ■ 물동량에 따른 목표연도의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신규 입지 개발
시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시설 : 8.34km - 컨테이너 17선석, 피더 4선석 ■ 방파제 : 3.20km ■ 관리부두 : 기존부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시설 : 10.10km - 컨테이너 24선석 ■ 방파제 : 5.30km ■ 관리부두 : 840m
하역능력	기존	■ 1,795만TEU/년(기존 부산항 신항 전체)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만TEU/년 × 17선석 + 29만TEU/년 × 4선석 = 1,612만TEU/년
	계	■ 3,407만TEU/년
개 략 사업비	기존	■ 88만TEU/년 × 24선석 = 2,112만TEU/년
	신규	■ 3,907만TEU/년
	계	■ 3,907만TEU/년
개 략 사업비	2030년	■ 2030년 : 7조 9,875억원
	2040년	■ 2040년 : 3조 2,573억원 (1조 5,543억원)
	합 계	■ 합 계 : 12조 7,991억원
개 략 사업비	2030년	■ 2030년 : 9조 7,943억원
	2040년	■ 2040년 : 6조 6,635억원
	2050년	■ 2050년 : 1조 3,951억원
	합 계	■ 합 계 : 17조 8,529억원

기초지자체 항만의 개발 · 관리 참여확대

▶ 항만의 개발 · 관리에 기초지자체 참여 필요성 제안드림

□ 항만의 기능변화와 세계 주요국가의 항만정책결정

<항만의 기능변화>

- 항만은 전통적으로 화물의 선 · 하역 등 대외교역항로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제한적 활용
- 오늘날 항만은 세계교역의 질적 · 양적 확대로 전통적인 항만 기능 외에도 물류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 그만큼 항만과 배후도시간 유기적 상호보완 중요성도 높아짐

<세계 주요국가의 항만정책결정>

- 외국 주요항만의 경우,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조화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적 노력을 전개
-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전 유럽국가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는 항만개발 정책결정권을 지방에 이양. 최근에는 중국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내려줌.

□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는 배제한 채 국가항만정책 결정

①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 기초지자체 참여배제

○ 우리나라의 항만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 광역시, 도에만 정책 참여권 부여

- 창원 등 13개 기초市, 소재 국가항만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 배제

{항만법 시행령} 제3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 ※ 구성인원 : 40명 이내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포항항, 동해·목호항

②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위원추천권 역시 광역에만 부여

○ 우리 市와 같이 항만을 보유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가공기업 항만공사가 소재한 곳은 “여수광양”이 유일한데,
→ 이들의 경우에도 위원추천권은 전남도에만 있음

○ 참고로, 부산항만공사 위원은 해수부4, 부산2, 경남1로 구성
상대적으로 부산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 7명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 기초지자체의 항만정책 참여확대 필요성

<문제점>

- 항만개발로 인한 경제혜택 범위 → 전국화, 광역화
- 환경피해,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 부담범위
→ 오로지 기초市
- 광역지자체 위원이 기초市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나,
지역여건과 현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 의견반영 한계

<인구 50만이상 도시, 항만정책참여 확대 건의>

- 해양거점도시들이 동북아시아 물류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게도
“중앙항만정책심의”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

5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 ❖ 공공 행정기관 유치를 통한 복합행정타운 기능 조성
- ❖ 행정타운의 배후 주거기능 및 신규 택지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2023년
- 사업량 : A=710,300㎡(우선해제지역 108,650㎡ 포함)
- 사업비 : 4,356억원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

□ 추진상황

- 양해각서 체결(경남도, 구.마산시, 경남개발공사) : '07. 07.
- 개발제한구역 해제(A=580,550㎡) : '09. 07.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심의 결정) : '12. 11.
- 사업 참여 취소 통보(경남개발공사→창원시) : '14. 09.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중도위(제2분과) 심의(재심의 결정) : '16. 06.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중도위(제2분과) 심의(조건부 의결) : '18. 12.

□ 향후계획

- 조건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19. 05.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19. 05.
- 특수목적법인 설립 : '19. 1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 08.
- 실시계획인가 : '21. 08.
- 공사 착공 : '21. 09.
- 공사 준공 : '23. 12.

□ 위 치 도



□ 현 황 도



6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

※ 스마트도시란 ?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I 추진방향

- ICT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한정된 도시 인프라의 과학적 관리·활용을 위한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 안전, 교통, 재난 등의 공공서비스 고도화 및 연계·통합으로 신규 IT융합 콘텐츠 창출
-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성으로 창의적 기술 및 아이디어 적극 활용

II 중·장기 단계별 추진전략

□ 제1단계(2018~2019, 2년) :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스마트도시 조성 로드맵 제시
- 기초인프라 구축 및 추진근거 마련 (스마트도시 추진 조례 제정)
- 민·관·학·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기존 도시관리체계를 지능형시스템으로 고도화사업 착수 (재난안전, 교통관제, 환경·대기, CCTV 등)

□ 제2단계(2020~2023, 4년) :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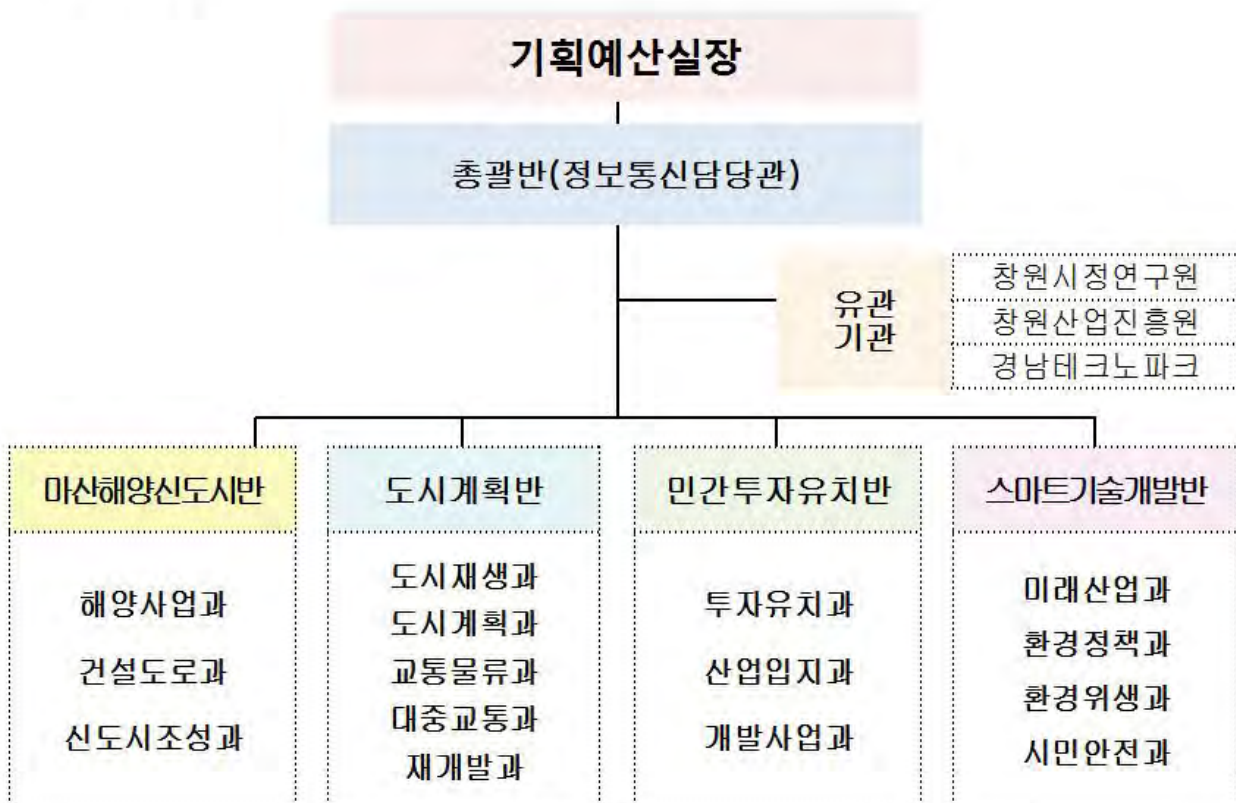
- 고도화된 도시관리서비스 통합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 1단계 서비스 실증 및 서비스 확산,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제3단계(2024~2027, 4년) : 「창원형 스마트도시」 파급 확산

- 서비스 선순환체계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
- 도시 전 분야에 첨단 ICT융합기술 확산 체계 구축

Ⅲ 추진단 구성

-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반 구성으로 협업체계 구축
- 스마트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유 및 향후 관련 국가공모사업 대비
- 구 성



IV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 시범조성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2005년 ~ 2020년
- 규 모 : 47만 6천㎡(14만 4천평), 공공주택 3,390호, 1,909억원
- 시 행 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점분야 : 안전(교통·방범) 및 친환경 분야 특화
- 선정배경 : 도심지와 이격(약3km)된 외곽지역, 주거계층 고려
- 향후계획 : 세부사업내용 협의(시, LH) → 설계용역 → 착공('19.)
- 주요시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 고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 내 에어커튼, 공공 WiFi, 공기질 측정 및 정화 등 → 대기오염 대비 시민건강 보호 → 재난(폭염,혹한) 발생 시 대피소 	버스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및 차량정보를 수집하여 무단횡단 억제. 보행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만 점등하여 차량흐름 통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스쿨존 이면도로
스쿨존 방범 CC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CCTV 영상 감시 통하여 재난·범죄 등 특정상황 발생 시 자동 경보 및 통합관제 전달 → 범죄발생 및 인명피해 예방 	학교주변 주거지주변 공원·하천 등
스마트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스마트가로등, CCTV, 비상벨 등 복합기능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범죄 예방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 고
<p>스마트 쓰레기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및 상업지역 등 쓰레기 발생 및 수거가 잦은 지역에 설치 · 자동압축 및 수거 시기 자동전송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증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p>공원 상업지역</p>
<p>여성아동 안심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범죄우려 지역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작동 시 자동 경보 및 112 출동 → 강력범죄 예방 및 여성아동 안전 	<p>공중화장실 공원 등</p>

-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
환영성명 및 창원형 스마트 산단 조성

1 창원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현황)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 조성

- 조성기간/규모 : '74. 2 ~ '06. 12 / 25,302천 m²(7,654천평)
- 입주업체 : 2,805개사(대기업 40개사)[2018년11월 기준(한국산업단지공단)]
- 기계 60% 전기전자 18.7% 운송장비 8.8% 철강 3% 기타 10%
- 가동현황 : (생산) 57조 6천억원 (수출) 181억달러 (고용) 127천명

생산액		고용 (명)			중소기업 비중		
누계생산 (억원)	누계수출 (십만달러)	남	여	계	가동업체 (개)	300인 미만업체(개)	비중 (%)
576,310	180,771	111,535	15,002	126,537	2,603	2,393	91%

■ (특성) 대기업 중심의 국내 최대 기계·방위산업 집적지

- 창원국가산단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17년 12월 기준 >
< 전국 산단의 생산액 4.9%, 수출액 4.6%, 고용 4.7% >

생산액 (억원,%)			고용 (명,%)			수출액 (백만달러,%)		
전국	창원	비중	전국	창원	비중	전국	창원	비중
11,764,013	576,310	4.9%	2,701,237	126,537	4.7%	391,096	18,077	4.6%

- 대기업 40개사와 다수 협력사가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관련 부품 산업과 공조 체제를 구축

▶ 우리나라 기계산업 총생산의 약 15.4%, 수출의 약 14.1% 점유(지역1위)

* 전국 방산지정업체 94개사 중 경남 29개사(31%), 창원 19개사(20%)로
전국 방위산업 매출액의 약 65%를 차지(경남 약 9조원)

- 생산기여도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약 5%를 담당

▶ 고용 4.7%, 생산액 4.9%, 수출액 4.6%

- 창원국가산단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개사로 약 7% 수준.

2 스마트 산업단지 개념과 그간의 추진상황



스마트공장을 뛰어넘어 창원경제 부흥의 신호탄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 (개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요소를 공장/산업시설/산업단지에 적용하여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첨단 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 (추진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산업단지 추진방안 회의' : '18. 10.
-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구축방안' 제출 : '18.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시범단지' 지정 건의 : '18. 12.
- 창원시 스마트산단 추진기획단 구성 및 실무회의 개최 : '18. 12 ~
- 스마트 선도산단 실행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제출 : '19. 1. 21.

■ (향후계획)

-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에 따른 사업단 구성 : 2019. 2월말
- 창원시 스마트산단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2019. 2월말
- 스마트 선도산단 실행방안 및 로드맵 수립 확정 : 2019. 3월말
- 스마트 선도산단 비전선포식 및 사업 착수 : 2019. 4월

3 창원시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방안

비전	사람과 기술이 모여드는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600개 → 800개) ② 스마트선도 프로젝트 40개 과제 추진 ③ 클라우드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④ 스마트공장 운영전문 인력 1천명 양성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혁신) 스마트화 + 플랫폼화 + 새로운 비즈니스 ○ (미래형 산단 구축) 신산업 육성 + 지능형 환경·교통망 ○ (친화 공간 조성) 근로자 보건복지 + 근로환경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 자유로운 창업 활성화 + 오픈 랩
실행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단계('19~'20) 스마트공장 보급/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 실증단계('21~'22) 스마트 인프라 실증, 신산업 리빙랩 운영 ○ 확산단계('22~) 제조업의 서비스화, 운영모델 수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생산성은 올라가고 불량률은 감소하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30.0%↑, 불량률 43.5%↓, 원가 15.9%↓ ② <u>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청년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2.2명의 일자리↑, 산업재해 22%↓



4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47개사업, 1조 2천억 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 기간	예산계획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3개 과제 47개 세부사업)			12,213	7,958.5	2,973.5	1,281
산단 제조 혁신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원센터	‘19~’22	240	160	80	
	산단 스마트공장 수요 발굴	‘19~’22	10	5	5	
	스마트공장 재정적 인센티브 집중지원	‘19~’22	80	60	20	
	스마트공장 one-stop(컨설팅) 지원	‘19~’22	40	20	10	10
	운영인력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19~’22	10	10		
	노후설비 교체 지원	‘19~’22	200	120	40	40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	‘19~’22	40	20	20	
	스마트 제조 기술전문인력 양성	‘19~’22	40	20	20	0
	스마트 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19~’22	12	6	6	
	보급형 스마트공장 공동 구축	‘19~’22	400	200	100	100
	업종별 상생형 모델 확산 지원	‘19~’22	200	120	40	40
	제조데이터 연계활동 시범사업(R&D)	‘19~’20	100	50	50	
	제조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비 R&D)	‘19~’22	60	30	30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19~’22	10	10		
	제조데이터 보호장치(ISMS 인증) 마련	‘19~’22	40	20	20	
	IIoT(산업용 IoT) 플랫폼 개발	‘19~’22	520	490	15	15
	스마트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19~’22	12	12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19~’22	50	40	10	
	고효율 파워유닛 소재부품 스마트제조 센터	‘19~’22	370	170	200	
	산단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9~’22	40	20	10	10
근로자 친화	기숙사 임대료 지원	‘19~’22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	‘19~’22				

공간 조성	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19~'22				
	개방형 체육관	'19~'22	200	100	100	
	도시 숲 조성	'19~'22	28	19	9	
	무료순환 통근버스 확대	'19~'22	20	10	10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19~'22	42	21	21	
	스마트편의시설	'19~'22	150	110	40	
미래형 산단 구축	스마트 창업센터 구축	'19~'22	380	230	150	
	오픈랩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	'19~'22	300	180	120	
	산단 내 네거티브존 시범도입	'19~'22	8	4	4	
	규제 샌드박스 활용	'19~'22	8	4	4	
	지능형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설립	'19~'21	29	14.5	14.5	
	지능형 환경·안전시스템	'19~'22	350	310	40	
	근로자 맞춤형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IoT기기 개발 센터 구축	'20~'22	600	300	150	150
	산단 행정관리 플랫폼 구축	'19~'22	40	24	12	4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20~'22	300	210	9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9~'22	150	80	60	10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19~'20	268	208	40	20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한 수소버스 보급	19~'22	600	300	200	100
	자율주행 셔틀운행 시범추진	19~'22	400	210	120	70
	협동·서비스로봇 시범 보급	'19~'22	168	120	40	8
	AI기반 대기질 예측관리시스템	'21~'22	40	33	7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구축	'19~'22	1,680	1,017	265	398
	방위산업 스마트화 지원기반 구축	'19~'22	578	351	221	6
	자율주행 C-ITS 테스트베드 구축	'19~'22	3,000	2,200	500	300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협동로봇 개발 지원사업	'19~'22	400	320	80	

「스마트 산단」 무엇이 달라지나?



- 스마트 공장 집적화 및 고도화 용이
(제조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스마트 공장 구축·운영 지원센터
(one-stop 컨설팅 및 지원 등)



- 스마트 구축 인력 양성
(운영·개발·전문관리 1,000명)
- 기업 참여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재직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 스마트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열린 R&D, 규제 혁신, 수소 등 신산업 지원)
- 미래산단 수출역량 강화
(기술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Joint 벤처 지원)



- 스마트 산단 통합 관제 시스템 도입
(지능형 환경·안전·교통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산단 입주 행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임주, 투자, 교통, 근로환경 지원)

스마트 산단 상생형 스마트 공장

800개 구축

생산성 **30%↑** 원가 **15.9%↓**



좋은 스마트 일자리

6,500개



스마트프로젝트

40개 과제 발굴



산업재해

22% 감소



*수치는 목표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현황 및 과제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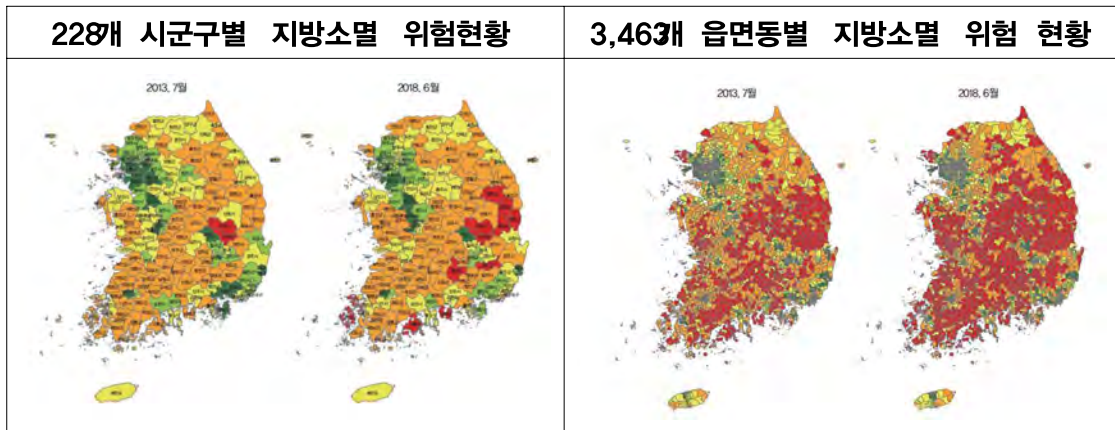
토론 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현황 및 과제

I. 서론

□ 지방소멸의 위기의식과 지역격차 심화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평균 0.91, 소멸 위험지역 89곳(39%)

※ 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8.7) 고용동향브리프

- 인구, 자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지역격차 폭의 확대
 - GRDP : 48.7%('10) → 49.4%('15), R&D 투자 : 64.3%('10) → 67.3%('15)
 - 문화시설 : 64.3%('10) → 67.3('16)
- 마스다 히로야(저) 지방소멸 : 여성인구 감소로 도시소멸 가능성 증가
 - 20세~39세 가임기 여성의 추이, 도쿄 일극중심의 인구집중에 경고

□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실

- 자치사무분야 :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가사무:지방사무=7:3 / 지방정부 사무:고유사무+중앙정부 위임사무 처리
- 자치재정분야: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입비중) 국세 : 지방세=8:2 (세출비중) 중앙 : 지방=4:6
- 자치조직분야 : 자율권 없음
 -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 주민자치분야 :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II. 자치분권 및 인구 100만 특례시 현황

□ 법적 현황

- 지방자치법(2018.11.13. : 정부입법예고)
 - 대도시 특례 인정(제175조)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3.20)
 - 인구 100만 이상대도시의 사무특례(제41조) :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물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소방의 구조·구급 업무 등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제42조):부시장 2명, 인구·도시특성·면적 고려한 행정기구 및 정원(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시행령에 세부사항 규정 없음
 - 대도시 재정특례(제43조) : 조정교부금과 도세중 100분의 10 이하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해당 시에 직접 교부/소방시설 충당 지역자원시설세(시비)
 - ※ 시행령(제17조)대도시 추가교부하는 도세비율: 1천분의 62로하며 동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한시적)

□ 인구 100만 대도시 현황

- 창원(106만), 수원(120만), 고양(104만), 용인(100만) 등 4개 시에 해당

구 분	인구 (명)	면적 (km ²)	GRDP (억원)	예산총계 (억원)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	공무원 정원(명) 〈총괄(본청)〉	소방 공무원 (명)
경상남도 창원시	1,057,032	747.67	358,668	27,002	42.37	3,882 (865)	802
경기도 수원시	1,202,628	121.05	286,585	27,292	55.73	3,234 (1,026)	-
경기도 고양시	1,040,608	268.05	176,731	20,234	48.88	2,755 (815)	-
경기도 용인시	1,004,081	591.37	327,756	22,150	62.07	2,584 (761)	-

※ 2018년 기준 (GRDP, 2015.12월 기준)

- 4개 대都市는 특정 광역시와 비슷한 인구·면적·GRDP 수준임
 - 울산광역시 제외한 창원시가 광주·대전 등 여타 100만 대도시보다 면적·GRDP 등이 높음

구 분	인구 (명)	면적 (km ²)	GRDP (억원)	예산총계 (억원)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	공무원 정원(명) <총괄(본청)>	소방 공무원 (명)
광주광역시	1,463,770	501.18	325,163	66,047	48.99	6,643 (2,250)	1,386
대전광역시	1,502,227	539.34	340,618	65,138	54.41	6,287 (2,254)	1,450
울산광역시	1,185,645	1,061.18	696,738	58,618	65.99	5,228 (1,818)	1,053
경상남도 창원시	1,057,032	747.67	358,668	27,002	42.37	3,882 (865)	802
경기도 수원시	1,202,628	121.05	286,585	27,292	55.73	3,234 (1,026)	-
경기도 고양시	1,040,608	268.05	176,731	20,234	48.88	2,755 (815)	-
경기도 용인시	1,004,081	591.37	327,756	22,150	62.07	2,584 (761)	-

※ 2018년 기준(GRDP, 2015.12월 기준)

Ⅲ. 100만 특례시의 실상과 창원시 현황

□ 100만 대도시 특례의 명시화 및 종합계획 발표(2018.10.30)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18.10.30.)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발표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대도시특례 확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및 특례 확대)
 - 재정분권 :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취득세·레저세 등에 대한 신규과세 대상 발굴)

□ 특례시 관련 법률의 실효적 특례 조항 미흡

- 지방분권법 특례관련 시행령 미비로 실효적인 특례조항 없음
- 특례시 명칭부여 등 법적 규정은 있으나, 사무특례 및 재정특례에 대한 세부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항 미흡
 - 재정분권 추진 발표(2018.10.30)후 구체적인 방침 없음

□ 창원시의 제한적 권한 및 문제점

- 기초지자체간 인구 및 생산 규모 등 미반영으로 차별화된 도시경쟁력 저하
- 울산광역시(118만명)와 창원시(106만)는 유사한 인구규모지만 예산 : 울산시(58,618억원), 창원시(27,002억원), 재정자립도 : 울산시(66.0%), 창원시(42.4) 공무원정원 : 울산시(5,228명), 창원시(3,882명) 등 격차 발생
- 100만 도시간 GRDP : 창원(358,668억원) 가장 높으나 기초생활수급자(21,287명)가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42.4%) 가장 낮아, 4대 도시간에도 격차 발생

구분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울산시	출처(기준일)
인구(명)	1,057,032	1,202,628	1,040,608	1,004,108	1,185,645	시 홈페이지(2017. 12월)
면적(km ²)	747.67	121.05	268.10	591.34	1,060.79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GRDP(억원)	358,668	286,585	176,731	327,756	696,739	국가통계포털(2015. 12월)
예산총계(억원)/본예산 기준	27,002	27,292	20,234	22,149	58,618	시 홈페이지(2018)
재정자립도(%)	42.4	55.7	48.9	62.1	66.0	국가통계포털(2018. 12월)
공무원 정원(명)	3,882	3,234	2,755	2,584	5,228	시 조례(208. 8월 현재) *소방직 제외
수출액(백만불)	17,608	7,640	959	23,287	66,700	관세청 (2017. 12월)
대기업(EA)/300인 이상	91	70	29	63	98	MDIS(2016. 12월)
사업체(EA)	84,991	70,004	63,642	48,111	82,948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산업단지 현황(EA) *국가·지방 포암 *조성중·미개발 제외	8	3	0	0	26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1분기)
대형유통업체 현황(EA)	22	24	34	16	22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공사·공단(EA) *직영기업 제외	2	1	1	1	5	지방공기업통합공시 (2017. 12월)
개발제한구역(km ²)	250.15	29.32	119.4	4	269.43	국가통계포털(2015. 12월)
도시지역/비도시지역(km ²)	595/374	121/0	192/75	388/205	755/389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공원(EA/천m ²)	414/24,603	325/8,445	249/6,304	283/6,880	588/36,381	국가통계포털(2015. 12월)
의료기관(EA)	1,224	1,555	1,134	1,158	1,330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해안선(km)/어양(EA)	324/51	-	-	-	166/27	국가통계포털(2017. 12월)
항만시설(EA)/물동량(천톤)	3/248,429	-	-	-	4/197,611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농가수(호)/농지면적(ha)	11,824/9,669	2,939/1,054	5,692/4009	6,712/7,370	12,451/10,889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임야(km ²)	427.12	25.96	85.57	315.48	672.16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대학(교)(EA)	6	6	4	9	5	국가통계포털(2017. 12월)
기초생활수급자(명)	21,287	18,472	20,967	7,467	18,776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노인(명)-65세 이상	128,745	115,074	124,071	121,295	120,846	국가통계포털(2018. 07월)
자동차등록현황(대)	559,516	475,847	384,526	410,302	538,720	국가통계포털(2016. 12월)
구/군 현황	일반구5	일반구5	일반구3	일반구3	자치구4/군1	국가통계포털(2017. 12월)
읍면동 현황	2읍/6면/50동	42동	39동	1읍/6면/24동	4읍/8면/44동	국가통계포털(2017. 12월)

※ 2018. 8월 현재기준

□ 100만 대도시 창원시의 문제점

- 인구 100만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에 애로
- 도시규모에 못미치는 제한적 권한으로 자치행정 역량 저하

IV. 창원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실질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특례의 명확화

- 100만 대도시의 정부공모사업 참여자격 확대

【현황】

- 각종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 공고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게 해당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자격 제한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독립적인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시도를 통해 신청하도록 함
- 광역지자체와 의견차이가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신청 불가 및 탈락 발생

-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유치,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등에 있어 한계와 제약 발생으로 지역경쟁력 약화

【특례적용】

- 각종 정부부처 공모사업 신청 정부 지침 마련 건의
-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의 광역자치단체 및 제175조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로 확대 명시

• 창원(진해)항만사업 참여 특례

【현황】

- 제2신항의 위치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으로 합의하였으나, 신항의 71%를 차지하는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 중심의 항만정책심의 및 항만개발에서 창원시 참여가 배제되었음
- 제1신항의 경우 부산강서구와 창원진해구에 위치하였고, 면적의 70%가 진해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명칭 사용 및 부산항만공사 등의 운영으로 진해구민의 반발이 있었으며, 제2신항 또한 진해구 제덕만 위치로 명칭문제 재발 및 시민단체 반발
- 제2신항이 진해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는 어떤 정책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었으며 어민 피해에 대한 민원대응만을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

【특례적용】

-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 고용, 어업민 피해 등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창원시의 참여
- 항만 및 인접도시 관련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지원
- 제2신항 및 부산(진해)항만공사 등 명칭에 진해(창원) 포함
- 항만시설개발운영권한 및 무역항 항만구역내의 공유수면관리 권한 이양

□ 공공서비스의 역차별 해소로 주민 삶의 질 확보

• 소방안전교부세의 직접 교부 특례

【현황】

- 100만 대도시인 창원시는 소방사무를 독립수행하나 소방안전교부세를 도비 보조금으로 받아 창원시의 자율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발생

【특례적용】

- 광역시도와 동일한 소방정책업무를 수행하므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절차 및 교부기준을 광역시도급으로 적용하여 창원시 소방서비스 질 확보, 자치 권한 및 재정상의 역차별 해소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사업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현황】

-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선정기준이 광역시(1억원), 중소도시(68백만원), 농어촌(38백만원)으로 편차 발생
- 긴급지원 주거지원 한도액 및 재산 합계액 기준의 경우, 광역시(387천원), 중소도시(253천원), 농어촌(145천원)으로 편차 발생

【특례적용】

-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대상자 및 긴급지원 등에 100만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선정 및 기본재산 공제액 선정기준을 중소도시가 아닌 ‘특례시’ 항목을 설정하여 지원 필요

□ 100만 대도시에 맞는 재정특례의 현실화

• 지방분권법 시행령(제17조)의 대도시 재정특례의 한시적 내용 삭제

- 지방분권법 제43조에 따라 대도시에 별도의 재정특례 부여하고 있으나 통합창원시에 한하여 201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은 100만 대도시 특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 지방소비세의 인상분(10%)을 대도시에 직접 교부

- 경남도에서 창원시의 인구 및 산업규모를 감안할 때 경남도의 30%를 차지하나 경남도의 조정교부금은 약 23%에 불과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발생

• 양도소득세 및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세원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목(취득세, 재산세)으로 지역수요로 발생하므로 지방세로 전환함이 타당

- 주세의 경우, 소비행위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납세지 변경 및 지방세로 전환하고 의존재원에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현재 주세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중이며 전액 지방재원으로 배분되고 있음

마산항개발에 따른 해양신도시는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1. 마산만의 역사와 의미

마산만은 가포와 서항지구, 어시장 앞 구항지구와 자유무역지역·봉암해안, 삼귀동 해안 등 도심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바다다. 하지만 그 경계는 소모도와 막개도(등대섬), 덕동만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그 바깥 쪽은 진해만이다. 이 경계선은 마창대교에서 2.1km 거리에 있다. 이는 마산항 항계선과도 일치한다. 바깥쪽 진해반도와 구산반도로 둘러싸인 내만인데다, 소모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파도를 막아 연중 평온하고 수심이 깊은 천연의 양항이다.

마산만이라는 명칭은 고려말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마산포'에서 유래했다. 당시 조정에 조량미를 공급하는 석두창이 이곳에 있었고,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해 주둔했던 정동행성 또한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마산포에 앞서 삼국시대까지는 골포, 이후 고려말 마산포로 바뀔 때까지는 합포라는 이름이 쓰였다.

마산만은 과거 휴양의 바다, 생존의 바다로 마산시 태동과 성장의 근거지로 “노산 이은상”이 노래한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다로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이 자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기억되고 있다.

2. 마산항 개발과 해양신도시의 조성

마산항 개발은 정부가 1996년에 수립한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과 2000년에 고시한 『마산항개발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따라 추진한 국책사업(마산가포신항 사업, 항로준설사업 등)과 연계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항만기능이 떨어진 재래식 부두를 현대화 하고 물동량 증가를 대비해 국가 무역항 전환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구.마산시는 항만계획에 의거 국가 항만정책에 부응하고, 신항조성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용을 市가 부담해서라도 쇠퇴하는 마산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사업성 평가 없이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를 2003년 해수부와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근거로 구.마산시는 서항·가포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착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해양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3. 해양신도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원의 당위성 및 필요성

협약체결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속에서 현재의 면모를 갖추기 까지 16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

국가무역항 개발에 주된 근거로 제시된 항만 물동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컨테이너 항만 개발로 가져다 줄 경제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신항의 컨테이너 항만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잡화부두로 전락하였다.

해양신도시 조성과정에 있어 기초가 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들이 변경된 상황에서,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 1,500억원을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너무 불합리하며, 정부 정책에 부응한 댓가로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무역항인 마산항 개발과 관련된 정부와 창원시간 협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 사업”이다.

해양신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창원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컨테이너 부두라는 가포신항 건설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설득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협약에 우선해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조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국책항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국책사업인 항만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재정적 효과를 누렸지만, 반대로 市는 협약에 구속되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 신항의 물동량 예측오류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마산항 개발 계획 수립시 불과 40 ~ 50km 거리에 국가 Mega Port인 부산항 신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고, 2006년 개장 후 컨테이너 화물들은 거의 부산신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실제 2017년 기준 가포신항의 총 화물량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의 38%, 컨테이너 물동량은 6%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가 예측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포신항은 기존 마산항 4부두를 통해 수출하던 자동차 물량까지 끌어들여 운영해야 할 정도로 컨테이너 항만 기능이 상실됐고, 사실상 원목, 철제를 취급하는 ‘잡화 부두’로 전락하였으며, 정부예측은 빗나갔고 정부가 자신했던 경제파급 효과도 전무했다.

또한 가포신항의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11년 12월이었으나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시민단체의 해양신도시 재검토 요구 등으로 2013년 6월 준공되어 해수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70억 증가에 대한 책임부담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에 기인한 매립 규모 논란과 마산만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에 팽배한 상황에서, 해양신도시 방향변경 (매립면적 축소 34만평 → 19만평)이 꼭 필요했던 만큼, 창원시 전액 책임 부담은 이치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해수부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항만부두로서의 역할 불능, 국가무역항 개발로 예측됐던 지역 경제파급효과의 요원 등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협약 체결 이후의 중대하고도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일한 사정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도있는 사업성 평가 없이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를 2003년 해수부와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근거로 구.마산시는 서항·가포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착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해양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3. 해양신도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원의 당위성 및 필요성

협약체결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속에서 현재의 면모를 갖추기 까지 16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

국가무역항 개발에 주된 근거로 제시된 항만 물동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컨테이너 항만 개발로 가져다 줄 경제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신항의 컨테이너 항만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잡화부두로 전락하였다.

해양신도시 조성과정에 있어 기초가 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들이 변경된 상황에서,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 1,500억원을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너무 불합리하며, 정부 정책에 부응한 댓가로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무역항인 마산항 개발과 관련된 정부와 창원시간 협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 사업”이다.

해양신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창원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컨테이너 부두라는 가포신항 건설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설득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협약에 우선해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조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국책항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국책사업인 항만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재정적 효과를 누렸지만, 반대로 市는 협약에 구속되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 신항의 물동량 예측오류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마산항 개발 계획 수립시 불과 40 ~ 50km 거리에 국가 Mega Port인 부산항 신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고, 2006년 개장 후 컨테이너 화물들은 거의 부산신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실제 2017년 기준 가포신항의 총 화물량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의 38%, 컨테이너 물동량은 6%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가 예측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포신항은 기존 마산항 4부두를 통해 수출하던 자동차 물량까지 끌어들여 운영해야 할 정도로 컨테이너 항만 기능이 상실됐고, 사실상 원목, 철제를 취급하는 ‘잡화 부두’로 전락하였으며, 정부예측은 빗나갔고 정부가 자신했던 경제파급 효과도 전무했다.

또한 가포신항의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11년 12월이었으나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시민단체의 해양신도시 재검토 요구 등으로 2013년 6월 준공되어 해수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70억 증가에 대한 책임부담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에 기인한 매립 규모 논란과 마산만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에 팽배한 상황에서, 해양신도시 방향변경 (매립면적 축소 34만평 → 19만평)이 꼭 필요했던 만큼, 창원시 전액 책임 부담은 이치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해수부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항만부두로서의 역할 불능, 국가무역항 개발로 예측됐던 지역 경제파급효과의 요원 등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협약 체결 이후의 중대하고도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일한 사정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6년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이포트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가포신항은 2005년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준공됐지만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장이 연기되자, 해수부는 민자부두의 용도를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다목적부두로, 수익보장방식은 당초의 MRG(최소수익보장) 방식에서 제한적 CC(비용보전)방식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비용 1,480억 원을 보전 하였다.

정부는 마산항 개발 관련 중대한 사정변경을 인정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을 변경해 준 것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의 협약만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은 평등 원칙에 反한다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공영개발 여론 등 “공익우선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창원시는 원래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마산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 투기장 부지를 도시개발용지로 확보하여 아파트와 상가지역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16년 전 협약 체결 시 지역주민여론의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었고, 현재 지역주민들은 주거·상업 위주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환경·생태·공공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현재 창원은 미분양 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남도까지 나서서 미분양 주택대책을 추진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우선하는 아파트, 상업시설 건설이라는 민간개발로 사업부지 개발을 진행할 경우, 이는 지역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구도심 쇠퇴 등 지역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다.

4. 결어

2019년 창원시는 주력산업인 조선·기계 산업 쇠퇴로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성장엔진이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과거 인구 50만 규모의 대한민국 8대 도시였던 옛 마산시는 현재 38만명의 지방소도시 수준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절박한 실정이다.

이에 마산만 중심에 위치한 해양신도시가 창원시의 재도약을 견인함은 물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시대인 만큼,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키우고 마산만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100만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창원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 방안

김종호 (창원시산업진흥원 정책팀장)

토론 3 창원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 방안

I.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 조성

- 조성기간/규모 : '74. 2 ~ '06. 12 / 25,302천 m²(7,654천평)
- 입주업체 : 2,735개사(대기업 40개사)[2018년10월 기준(한국산업단지공단)]
 - 기계 60% 전기전자 18.7% 운송장비 8.8% 철강 3% 기타 10%
- 가동현황 : (생산) 57조 6천억원 (수출) 181억달러 (고용) 127천명

생산액		고용 (명)			중소기업 비중		
누계생산 (억원)	누계수출 (십만달러)	남	여	계	가동업체 (개)	300인 미만업체(개)	비중 (%)
576,310	180,771	111,535	15,002	126,537	2,603	2,393	91%

□ (특성) 대기업 중심의 국내 최대 기계방위산업 집적지

(2017. 12.)

생산액 (억원,%)			고용 (명,%)			수출액 (백만달러,%)		
전국	창원	비중	전국	창원	비중	전국	창원	비중
11,764,013	576,310	4.9%	2,701,237	126,537	4.7%	391,096	18,077	4.6%

* 전국 방산지정업체 94개사 중 경남 29개사(31%), 창원 19개사(20%)로
전국 방위산업 매출액의 약 65%를 차지(경남 약 9조원)

○ 생산기여도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약 5%를 담당

▶ 고용 4.7%, 생산액 4.9%, 수출액 4.6%

[스마트 산업단지란?]

ICT 기반의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최첨단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입지여건과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과 기술이 모여드는 **스마트 선도산단** 구축

목표

- 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800)
- ② 스마트선도 프로젝트 47개 과제 추진
- ③ 클라우드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④ 스마트공장 운영전문 인력 1천명 양성

추진 방향

- (주력사업 혁신) 스마트화 + 플랫폼화
-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 스마트 인재 육성
- (정주환경 혁신) 지능형 환경·안전·교통망 + 근로환경 개선
- (창업기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 자유로운 창업 활성화

실행 로드맵

- 시범단계('19~20)** 스마트공장 보급/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 실증단계('21~22)** 스마트 인프라 실증, 신산업 리빙랩 운영
- 확산단계('22~)** 제조업의 서비스화, 운영모델 수출

추진 전략

신단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구축

- ① 스마트화 ②서비스화 ③친환경화 ④플랫폼화

기대 효과

- 1 생산성은 올라가고 불량률은 감소하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생산성30.0% ↑, 불량률 43.5% ↓, 원가 15.9% ↓
- 2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청년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평균 2.2명의 일자리 ↑, 산업재해 22% ↓

1. 제조혁신 산단 구축 (20개 사업)

- ① 스마트공장 수요 발굴 및 확산 집중 지원
- ② 스마트공장 수요 및 공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 ③ 보급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업종별 상생형 모델 확산
- ④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
- ⑤ 제조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2.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8개 사업)

- ① 근로자 주거 공간 지원 확대
- ② 문화, 건강, 복지가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

3. 미래형 산단 구축 (19개 사업)

- ① 스마트창업 공간 조성 및 규제 혁신
- ② 지능형 환경·안전시스템 구축
-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④ 산단 행정플랫폼 및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⑤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구축
- ⑥ 창원 주력산업 (방위, 항공, 로봇, 자동차)의 스마트화



출처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결안건 제1호), 제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03

Ⅲ. 중점 추진과제



1 제조혁신 산단 구축

1 스마트공장 수요 발굴 및 확산 집중 지원

- (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기업 지원
- (고도화) 기초단계 구축기업 고도화 달성 지원
- (컨설팅) 스마트공장 one-stop 컨설팅 지원
- (인센티브) 스마트공장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2 스마트공장 수요 및 공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스마트공장의 운영인력, 기술전문인력을 관내 대학과 협업하여 양성
 - * (재직자 직무전환) 재직자를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 * (신규인력 양성) 졸업생·학사, 직업계고, 폴리텍, 산학융합원, 대학
 - *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설계·기획이 가능한 공학석사 학위과정
 - * (운영 플랫폼 구축)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 보급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상생형 모델 확산

- 기초~중간1 단계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중간2~고도화 단계 지원 확대
- 업종 및 벨류체인 기업간의 상생형 모델 확산으로 성과 극대화 추진
 - * 유형별(업종, 제조방식, 단계) 선도공장 보급 및 고도화 추진
 - * (상생형 모델) 가치사슬 연계형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구축 및 확산
 - * (실증 검증) 기업의 신공정·신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4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스마트공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신기술의 기업현장의 접목을 위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 *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창원대, 경남대, 폴리텍, 산학융합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창원국가산업단지 MC 및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제조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산단 내 업종별 협업 솔루션 개발
 - * 클라우드 기반 공동 활용 지원, 산업용 IOT 및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 업종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지원
-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 구축과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사업’지원
 -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R&D 지원, 스마트 제조산업 HW 기술개발(협업로봇, 센서)

제조혁신 산단 구축으로 경제부흥을 실현합니다.



2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1 근로자 주거 공간 지원 확대

- 기숙사 임대료 지원,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서 근로자의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주거에 대한 문제 해소

2 문화, 건강 및 복지가 함께하는 산단 조성

- 복합문화센터,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도시숲 및 주차장 조성, 도서관, 등 근로자가 친화공간기반 조성
- * 도서관, 근로자 맞춤형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IoT 기기 개발센터 구축 등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으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3 미래형 산단 구축

1 스마트 창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

- 스마트창업센터 + 오픈 랩 + 컨설팅스마트창업 환경 조성
- 산업단지내 네거티브존,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사업화 걸림돌 제거
- *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스마트 창업센터 구축

2 지능형 환경·안전시스템 구축

- 스마트산단에 맞는 지능형 교통인프라 및 환경·안전시스템 구축, 편의시설과 산단 행정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산업단지의 생산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산업기반 구축
- * 지능형 교차로·주차장 구축, 지능형 환경·안전·통합 관제센터 구축
- * 교통운영효율화를 위한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및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사업 추진

4 산단 행정관리 플랫폼 및 스마트산단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자율주행 셔틀 버스, 협동 및 서비스 로봇 시범 보급, AI 기반 대기질 예측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도입, 그리고 관련산업 육성 추진

* AI 기반 대기질 예측관리 시스템 도입

5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산단내 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 친환경 에너지 발전, 공급, 관리, 충전 등의 산업 기반 구축

* 이동형 수소 충전소 개발 및 실증,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 수소 액화,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 추진

6 창원 주력산업(방위, 항공, 자동차)의 스마트화

- 창원의 주력산업인 방위, 항공, 자동차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생산성 및 혁신성장 능력 확보

* 첨단 방위산업 지원센터, 방산 부품개발 및 성능향상, 수출 지원, 국방 첨단기술 융합 플랫폼 구축, 드론 위치기반 서비스, 미래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C-ITS 테스트 베드 구축 등 추진



Ⅳ. 스마트 창원국가산단의 2022년 모습

「스마트 산단」 무엇이 달라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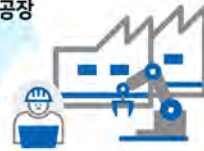


- 스마트 공장 집적화 및 고도화 용이
(제조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스마트 공장 구축·운영 지원센터
(one-stop 컨설팅 및 지원 등)

스마트 산단 상생형 스마트 공장

800개 구축

생산성 **30%↑** 원가 **15.9%↓**



- 스마트 구축 인력 양성
(운영·개발·전문관리 1,000명)
- 기업 참여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재직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좋은 스마트 일자리

6,500개



- 스마트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열린 R&D, 규제 혁신, 수소 등 신산업 지원)
- 미래산업 수출역량 강화
(기술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Joint 벤처 지원)

스마트프로젝트

40개 과제 발굴



- 스마트 산단 통합 관제 시스템 도입
(지능형 환경·안전·교통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산단 입주 행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입주, 투자, 교통, 근로환경 지원)

산업재해

22% 감소



*수치는 목표치



MEMO

MEMO

MEMO

MEMO



민주자치 발전포럼

주최 :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주관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